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양성평등정책 추진방향 연구 과제책임자 마경희 연구위원 (Tel:02-3156-7267 / e-mail:mkhee@kwdimail.re.kr)

양성평등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제안*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원고에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와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안함으로써 향후 수립될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등 중장기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여 양성평등정책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을 분명히 하고, 기존의 여성정책과 단절되지 않으면서 정책 환경과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안함.
- 제안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 변화된 정책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여성 역량 강화 정책의 재설계
 - ▶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폭력 피해 여성 보호를 넘어서 젠더기반 폭력으로 확대
 - ▶ 기존의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은 양성평등한 태도와 실천의 장애가 되는 지배적 남성성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남성들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들을 포괄하여 개선
 - ▶ 남성의 가사와 돌봄 역할 및 책임 강화, 여성과 남성이 가사와 돌봄을 동등하게 나누는 남성성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 필요
- 이 연구의 결과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등 중장기 양성평등정책 추진 과제와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발전과정¹⁾



1)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5: 10~11)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책 명칭이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법과 정책 명칭의 변화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및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②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양성평등정책에서 강화되어야 할 정책 방향을 도출함.

▶ 둘째, 향후 정책 환경의 변화가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함.

▶ 셋째,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함.

③ 연구방법

▶ 전문가 집담회 : 전문가 델파이 조사문항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개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목적 : 변화된 정책 환경과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 제안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2016.7.29~11.1, 웹조사

■ 조사대상 : 학계, 정책연구자, 여성단체, 공무원 등 40명

2. 조사분석결과

1) 지난 30년간 여성 정책의 성과와 과제

①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주요 영역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

영역	성과	과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와 여성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결혼퇴직제 등 직접적, 명시적 성차별 감소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여성취업 지원 등 여성취업 관련 법·제도 확대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별(여대생, 농업인, 과학 기술인 등) 여성 취·창업 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임금격차, 고용불안, 저임금 등 여성 일자리의 낮은 질적 수준 여전히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장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 어려운 노동환경 승진, 관리직 이동의 어려움 등 유리천장 현상 지속
성별분업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고시, 법조계, 의료, 행정, 군인, 경찰 등 남성 집중 전문직 분야의 여성 증가 아버지 육아휴직 인센티브 등 남성의 양육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사회적 관심 증가 젊은 세대 중심 가사노동 성별분업 완화 및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증가했으나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낮음 가사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은 변화하지 않음 남성은 건설·중공업, 여성은 돌봄·서비스업 등 노동시장 내 성별분리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대표 여성 50%, 정부위원회 여성 40% 목표제 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제도 실시 국회의원, 공무원, 정부 위원회 등 정치·행정 영역 여성 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관리직 공무원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절대적 수준에서 낮음 공기업 및 민간기업 관리자,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등에서 매우 낮은 여성 비율 국회, 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여성들의 실질적 대표성 미흡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한부모, 결혼이주 여성, 장애여성, 북한 이탈 여성 등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 취약계층 여성 범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 미흡 취·창업 지원 등 취약계층 여성 직업 역량 강화 미흡 중고령, 노인 여성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 존재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법·제도·서비스 체계 구축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민감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대학에서의 성희롱, 데이트 폭력, 스토킹, 여성혐오 등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느끼는 폭력으로부터의 위협 증가 가해자 교정치료 효과 미흡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학교 내 성인권 교육 제도화 캠페인, 미디어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의식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방식과 내용 측면에서 양성평등 관련 교육의 질적 수준 부족 구조적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관행 지속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반감, 여성혐오, 여성과 남성의 갈등 심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설치,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양한 여성정책 추진 근거 법령 등 여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군가산점제, 호주제 폐지 등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의 주변화된 위치와 타부처에 대한 낮은 영향력(예산, 업무의 범위, 권한 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개념 정립 부족
성 주류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국가재정법」 등 근거 법령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 등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등 도구 적용의 양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주류화 관련 정책에 대한 무관심, 관료적 이해, 반감 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와 공감대 부족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의 정책 개선효과 미흡

☑ 위와 같은 전문가 평가에 기반해 볼 때 향후 양성평등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여성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 성공적으로 구축된 법·제도,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가사·양육·돌봄 책임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 여성혐오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폭력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구이자 성 주류화 주관 기구로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2) 미래 환경 변화와 양성평등정책 의제

- ④ 미래 환경 변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 저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으로의 여성 노동 집중과 주변화
 - ▶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 ▶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불안과 빈곤심화
 - ▶ 여성혐오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폭력 증가
 - ▶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 ▶ 여성 노인의 복지수요 증가
 - ▶ 여성 1인가구의 안전
 - ▶ 결혼 이주 이외 이주여성(난민, 노동이주 등)의 증가와 인권침해
 - ▶ 미혼모 증가
 -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성별 격차
 - ▶ 통일 후 여성의 빈곤, 고용악화

3) 양성평등정책의 쟁점 가.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정책의 차이

- ④ 차이가 있다는 입장
 - ▶ 정책대상의 차이: 정책 대상이 여성에서 '양성으로' 또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여성 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이 양성평등정책이라는 입장.
 -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악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인식이 약화됨.
 - ▶ 정책 목표 자체가 여성 차별 개선, 여성의 지위 개선에서 불평등한 젠더관계 또는 성불평등 구조의 변화로 변화되었다고 봄.

- ④ 차이가 없다는 입장
 - ▶ 정책 명칭 변화에 불과함.
 - ▶ 여성정책이든 양성평등정책이든 정책 목표는 성평등에 있음.

나. 정책명칭 변화의 영향

- ④ 정책명칭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이 있었음.
 - ▶ 남성을 위한 정책 요구가 증가하고 기존 여성정책이 약화될 것임.
 - ▶ 정책에서 변화가 없을 것임.
 - ▶ 남성을 위한 정책 요구와 기존 여성정책이 병행될 것임.
- ④ 남성을 위한 정책 요구가 증가하고 기존 여성정책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음.
 - ▶ 여성과 남성의 양적·기계적 균형(50:50의 정책 수혜)을 양성평등으로 보는 것은 평등에 대한 왜곡된 이해임.
 - ▶ 여성이 놓인 불평등한 현실과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를 간과한 것임.
 - ▶ 양성평등에 대한 양적·기계적 이해는 기존 여성정책을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규정함으로써 신규 여성대상 정책의 도입이나 확대를 제한하게 될 것임.
 - ▶ 여성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 양성평등정책은 여성과 남성을 각각 위한 정책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양성평등에 대한 철학을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④ 남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책의 약화도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함.
 - ▶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차별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채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
 - ▶ 법의 명칭은 바뀌었으나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간이 변화되기는 어렵고 남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음.

④ 남성을 위한 정책 요구와 기존의 여성정책이 모순되지 않으며, 함께 병행될 수 있다고 보는 긍정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책의 방향을 제안함.

- ▶ 기존의 성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여성이 처한 불리한 위치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성별분업의 해소를 위한 남성의 역할 변화, 성평등을 위한 활동에서 남성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다. 남성대상 정책의 방향

④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가능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의 정책이 도출됨.

- ▶ 남성의 가사·돌봄 역할 강화
- ▶ 남성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 증진
- ▶ 성평등을 위한 남성 참여 확대
- ▶ 여성 집중 직종으로 남성 진출 지원
- ▶ 남성을 위한 복지
- ▶ 남성에 대한 차별 제거

④ 그러나 6가지 유형의 정책 중 양성평등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합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

〈표 2〉

구분	정책 유형
중요도와 합의 수준이 높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가사·돌봄 역할 강화 ▪ 남성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 증진
중요도는 높지만 합의 수준은 낮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을 위한 남성 참여 확대
중요도와 합의 수준이 모두 낮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집중 직종으로 남성 진출 지원 ▪ 남성을 위한 복지 ▪ 남성에 대한 차별 제거

④ 중요도와 합의 수준이 높은 정책 유형과 과제

- ▶ 남성의 가사·돌봄 역할 강화
 -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제안되었음.

〈표 3〉

구분	정책과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강화	장애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의 개선 ▪ 남성들의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기업 내 장애물 제거 ▪ 남성 관리자 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남성육아휴직제' 의무화(공공기관'평가제도 등에 지표로 도입)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 정시퇴근 정책 ▪ 초과근무 축소, 회식문화 개선
인식 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의 돌봄 참여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 아버지의 협력적 부모 역할 지원 ▪ 남성이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 가사요리 관련 교육 ▪ 가족 프로그램에서 아버지 참여

▶ 남성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 증진

-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제안되었음.

〈표 4〉

구분		정책과제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성별고정관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을 위한 성평등 교육 ■ 남학생, 남자 청소년, 남자 청년 대상 양성평등 교육 ■ 민방위 교육에서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성별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교육
구분		정책과제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성별고정관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도 성역할 부담과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교육 ■ 온라인/SNS에 만연한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문화 개선 프로그램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여성혐오적 표현물이 갖는 문제점 및 왜곡된 젠더관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남성 문화 개선	남성들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들 사이의 폭력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한 폭력예방 교육, 폭력 고발자 보호, 폭력행위자 처벌
	군대 내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문화 개선 ■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의식, 구제절차 교육을 통한 남성중심적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군대 내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 성문화에서 자유로운 권리, 집단적 성문화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④ 중요도는 높지만 합의 수준이 낮은 정책

- ▶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이 있었음.

〈표 5〉

유형	정책과제	반론
성평등을 위한 남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교육 남성 강사 집중 양성 ■ 히포쉬(HeForShe) 캠페인, 화이트리본 캠페인, 성평등이나 반여성폭력 캠페인에서 남성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과 같은 정책 수단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경향

④ 중요도와 합의 수준이 모두 낮은 정책

〈표 6〉

유형	정책과제	반론
여성 집중 직종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직업분리를 개선하기 위한 돌봄 관련 직종 남성 취업 반 개설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론1: 남성들이 돌봄 직종에 진출하지 않는 것은 남성에 대한 성차별의 결과가 아님.
남성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간호, 노인 돌봄 등 기존의 여성 직종에 남성 할당제 도입 등 돌봄 직종에서의 성별직업분리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론2: 성별직종분리의 문제의 중심적 이슈는 여성의 남성중심 직종으로의 진입 장벽 문제 ■ 반론3: 돌봄 직종의 우선적 문제는 남성의 진출을 지원하기에 앞서 저임금 불완전 고용 등 평가절하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 하는데 있음.

〈표계속〉

<p>남성을 위한 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독신부/미혼부, 1인 남성가구, 다문화 가족 한국인 남성, 은퇴 남성, 장년기/노년기 남성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남성 지원 남성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론1: 필요는 있지만, 양성평등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는 정책은 아님. 반론2: 남성을 위한 복지 접근에서 제안된 정책은 이미 복지정책에서 다루고 있거나 복지정책의 영역 반론3: 대상별 복지 보다는 전반적인 복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시스템 조정이 필요하다는 복지에 대한 일반론적 반론
<p>남성에 대한 차별 제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차별의 사례로 경제활동 분야,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는 남성에 대한 편견, 군대징집 문제가 제시됨. 경제활동 분야에서 남성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한 현실이 알려진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통계가 필요하다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은 무엇을 남성에 대한 차별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논쟁적이며, 남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보다 더 심각하므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다는 주장

3. 정책제언

☑ 양성평등의 개념: 모든 사회영역에서 성불평등한 관계의 변화

- ▶ '양성평등'은 일견 매우 자명해 보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사실상 매우 논쟁적인 개념임.
 - 같음으로서 평등, 차이의 인정으로서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 평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음.
 - 어떤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는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의 목표이자 지향점이 되며, 정책 도입의 논거가 되므로 양성평등정책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임.
- ▶ 전문가들이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양적·기계적 양성평등 개념을 대체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성불평등한 관계의 변화"로서 평등 개념이 필요함.
 - '같음으로서 평등', '차이의 인정으로서 평등', '주류의 변혁으로서 평등'은 동일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은 비록 다르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현실을 문제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짐.
 - 양성평등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낮은 지위의 문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여성과 남성의 양적·기계적 균형의 문제로 환원된 양성평등 개념이 평등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상들간의 '정책 수혜의 균형'으로 본다면, '성불평등한 관계의 변화'로서 양성평등 개념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정책의 대상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이들 사이에서 정책의 수혜를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불평등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 양성평등정책 방향

- ▶ 변화된 정책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여성 역량 강화 정책의 재설계
 - 미래에 시급한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하는 저임금 돌봄·서비스 직종 여성 노동의 주변화,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불안과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 ▶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폭력 피해 여성 보호를 넘어서서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 확대함.
 - 여성에 대한 폭력 뿐 아니라 남성들 사이의 폭력,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폭력까지 포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 구축 뿐 아니라 남성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증진,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에서의 남성 참여 확대 등 남성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보다 포괄적인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

- ▶ 기존의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은 양성평등한 태도와 실천의 장애가 되는 지배적 남성성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남성들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들을 포괄하여 개선함.
 - 양성평등 교육은 ‘성평등과 남성’, ‘남성에 대한 성별고정관념’ 등 남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유치원부터 각급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 ▶ 성별분업 완화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의 문제로 인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필요로 함.
 - 남성의 가사·돌봄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함.
 - 단순히 휴직 이용률의 증가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가사와 돌봄을 여성과 동등하게 나누는 남성성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병행되어야 함.